



미래부-방통위의 불길한 동거 700MHz-UHDTV 연구반 발족

8월 21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회동을 갖고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방안 모색 및 UHDTV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반 구성에 합의했다. 우선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700MHz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까지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700MHz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연구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업계 대표로 별도의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실무협의회가 전체 연구반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 기관은 내년도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추진 중인 유료방송 UHDTV 등 UHDTV 방송 전반의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추천하는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자, 제조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매체별 특성에 입각한 건전한 UHDTV 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UHDTV 방송발전 연구반(가칭)'을 조속히 출범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이번 회동의 의미를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적 공동전선구축에 방점을 찍은 것과는 달리, 그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양 기관의 단순한 공동전선구축 외에도 훨씬 다면적이고 복잡한 속내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파수 연구반과 UHDTV 연구반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부분이다. 물론 주파수와 UHDTV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UHDTV 발전 로드맵을 두고 미래부가 유료 방송 중심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사실상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배와 정부가 지원하는 UHDTV 발전 주체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만약 700MHz 대역 주파수가 통신에 할당되면 자연스럽게 UHDTV 발전 주체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즉, 분야는 다르다 해도 광범위한 뉴미디어의 발전 청사진을 작성하는 단계로 사안을 집중 시켜보면 사안은 자명하다. 지상파 방송사가 다른 주파수 중에서도 난시청 해소와 더불어 UHDTV 발전을 위해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극단적으로 재단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700MHz 대역 주파수가 통신에 할당되고 지상파에 일정 정도의 UHDTV 발전 역할이 주어진다면 더 큰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동은 UHDTV와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의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제 두 사안은 마냥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UHDTV 연구반에도 함정은 있다. 지금까지는 미래부가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고 방통위는 콘텐츠 부족 및 제반 사항의 미흡을 이유로 기술도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는 방통위를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미래부의 패착과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던 방통위의 정치적 판단이 어느 정도 섞여 있다. 이 말은 역으로 어느 정도의 소통만 진행되면 순식간에 UHDTV에 대한 양 기관의 의견합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UHDTV 발전에 대한 의지는 미래부가 방통위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는 8월 21일 간담회 종료 후 있었던 브라핑에서도 드러났다. 바로 '내년도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추진 중인 유료방송 UHDTV 등 UHDTV 방송 전반의 발전을 위해'라는 대목이다. (3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175호 방송기술저널은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25일 발행됩니다

디지털 정국, 지상파의 역할은?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열려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고 DTV KOREA, 방송인총연합회가 후원한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세미나가 8월 29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의 미래와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본 세미나는 약 5분간 이어진 디지털 방송 직접수신 시연회와 더불어 강상현 한국방송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에 강 회장은 "디지털 방송 전환 이후 지상파 고화질 환경이 구축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미지수"라며 "방송의 중심은 지상파 방송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 전환의 해박을 시청자에게 온전히 전달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의 책무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에 나선 김환영 DTV KOREA 회장(KBS 사장)은 "방송은 50년의 역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며 "방송환경이 무한경쟁으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공익의 가치가 위축되고 있지만, 이번 세미나가 지상파의 건전한 콘텐츠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계기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발제자로는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플랫폼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나섰다. 김 교수는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방송사는 생존의 기로에 섰다"며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상파 MMS 및 직접수신을 제고를 중심으로 뉴미디어 플랫폼 도입을 통한 지상파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직수를 제고를 위해 2013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제안한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개선 정책 로드맵의 현실화와 지상파 MMS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동시에 OHTV와 UHDTV, 여기에 OTT와 방송사의 소셜 미디어 접목을 통해 지상파 방송의 뉴미디어 플랫폼 도입도 주장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박성규 미래방송연구회 수석부회장은 지상파 방송과 UHD 방송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박 부회장은 "UHDTV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상파 UHDTV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박 부회장은 "UHDTV 발전을 위해서 방송에 700MHz 대역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인지해야 한다"며 "700MHz 대역 주파수는 전파의 그린벨트다"고 단언했다.

종합토론에는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최우정 계명대 교수,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과 이남표 MBC 정책협력부 정책위원, 박진우 KBS 미디어 정책부장의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에 강 교수는 "보편적 서비스 우선 정신에 입각해 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 근거는 방송에 있다"고 단언하는 한편, "지상파의 저조한 직수를 제고 등 지상파의 노력도 절실하다"고 전했으며 최 교수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의 근거는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 사무국장은 "지상파 방송의 활로로 UHDTV를 찾기 보다는 직접수신을 제고 등 시청자 복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의 활성화 방안이 맹목적인 방송기술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 복지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남표 MBC 정책협력부 정책위원은 "UHDTV 발전은 콘텐츠를 가진 지상파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으며 박진우 KBS 미디어 정책부 부장은 "UHDTV는 지상파가 살아남기 위한 보루이며, 700MHz 대역 주파수는 방송이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박 부장의 경우 700MHz 대역 주파수의 절반으로 DTV, DMB 등을 아우르는 통합 지상파 플랫폼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Photo News



지상파 디지털 직접수신, 어렵지 않아요!

8월 29일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주최측에서 본격적으로 세미나가 열리기 직전, 빌딩이 많은 서울 한복판 고층 건물에서도 훌륭한 지상파 디지털 직접수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연하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 R O A D C A S T I N G & T E C H N O L O G 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ETA(국제방송장비, 음향기전)전시회 무료
-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사설

종편 봐주기, 이제 끝내야 한다

종편 심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한가

내년 초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둔 가운데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의 최종 심사기준안이 공개됐다. 지난달 초안이 공개된 이후 '종편 봐주기'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연구반은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수정된 심사기준안 역시 '뽕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다.

추가 특혜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가장 큰 문제는 연구반 내부에서 제재 수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구반은 심사기준안을 내놓으며 종편의 심사기준안이 지상파 방송의 재승인 심사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기존 지상파 방송 재승인 심사안에 핵심 심사항목 부분, 즉 심사항목 2번인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3번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항목을 선정해 해당 항목의 배점이 60% 미만일 경우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지상파 방송 재허가 탈락 조건인 '1000점 만점에 650점 미만시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개별 심사항목 40% 미만시 조건부 재허가'에 또 하나의 조건이 추가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종편에 대해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긍정적이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를 여겼을 경우의 제재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구반은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두 가지 제안을 해놓은 상태다. 방통위가 제재 조치로 '재승인 거부' 즉 퇴출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제 공은 방통위 상임위원회에 넘어간 상황이다. 종편에게 또 다른 특혜인 '조건부 재승인'의 여지를 남겨줘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도 엄격히 해야 한다. 방송 산업은 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기준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 부분이 축소됐다. 건전한 재무구조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방송사들은 방송 시장 자체를 망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산업 자체에선 재정 부분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승인조건 이행 여부' 역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연구반은 앞서 종편의 심사기준안을 내놓으면서 지상파 방송의 재승인 심사안을 기준으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승인조건 이행 여부 항목을 보면 '종편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거둘 수가 없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재허가 시 권고사항, 조건, 이행각서 등 3가지 유형의 준수사항을 붙이고 이 중 조건과 이행각서는 어길 경우 재허가 철회 및 향후 재허가 추천 배제사유가 된다. 그런데 종편의 재승인 심사기준안을 보면 오직 이행실적을 제출했는지 여부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 강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다.

방통위에 요청한다. 진심으로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생각한다면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안'을 제출하기 전 더 이상의 특혜 논란이 없도록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LTE 주파수 경매 종료

SKT와 KT는 함박웃음, LG유플러스는 쓴웃음

이동통신업계 최대 이슈였던 LTE 주파수 경매가 종료됐다.

KT는 결국 기존에 확보한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1.8GHz 대역(D2블록) 15MHz 폭을 9,001억 원에 확보해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SKT는 1.8GHz 대역(C2블록) 35MHz폭을 1조500억 원에, LG유플러스는 2.6GHz 대역(B2블록) 40MHz 폭을 4,788억 원에 낙찰받았다.

지난달 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KT는 주파수 경매 10일째였던 지난 30일 50라운드에 걸친 1단계 오퍼입찰에 이어 2단계 밀봉입찰까지 진행해 결국 기존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있는 주파수 대역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KT는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KT측 관계자는 “우선 오는 10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LTE-A와 달리 단말기 교체 없이 두 배 빠른 LTE 광대역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SKT는 가장 실속을 챙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SKT 역시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1.8GHz 대역 주파수를 확보했으며 업계 생각보다 금전적 출혈도 적었다. 관련 업계에서는 “낙찰가격은 1조500억 원이지만 애초 경매 시작가가 약 6,7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었다”면서 “2011년에 낙찰받은 1.8GHz 주파수 반납 시 일부 감면받는 부분도 있어 실제 내야 할 돈은 더 적다.

결국은 합리적인 가격에 실속까지 챙긴 SKT가 승자”라고 분석하고 있다.

SKT나 KT에 비하면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얻은 성과가 작다는 평을 받는다. 최저 입찰가로 2.6GHz 대역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은 적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LTE 주파수 대역은 1.8GHz 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 관계자는 “SKT와 맞붙어 수조 원을 쓸 수는 없다”면서 “1.8GHz 대역 다음으로 2.6GHz 대역 주파수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G유플러스가 1.8GHz 대역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SKT나 KT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매는 끝났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는 남았다. 가장 큰 문제는 경매 대금이다. 이번 LTE 주파수 경매의 총 대금은 2조4,289억 원으로 일각에서는 경매 대금이 결국은 통신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다. 정부 측에서 주파수에 대한 장기 정책이 없기 때문에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신사간 과잉 경쟁과 요금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제50회 방송의 날을 하루 앞둔 9월 2일 오후 6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축하연에 참석해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 방송 콘텐츠 사업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송 콘텐츠 제작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평규제의 큰 틀 안에서 미디어 산업의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전체가 꾸준히 제기하던 방송 규제 완화 주장 목소리에 화답한 셈이다. 물론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정책 추진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대통령으로서 방송정책 활성화에 대해 최소한의 목소리를 낸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방송의 날을 맞아 KBS 국정원 간첩사건 불방 및 방송 공공성 문제와 해지 언론인 현안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점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다. 당장 방송의 기본적인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눈을 돌려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화룡점정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방송 장악자’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악이라는 말은 없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동시에 그는 “남의 자유를 훼손하는 자유가 있을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송을 세계적인 방송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당장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보도와 관련해, 어쩌면 그 이전부터 착실하게 진행된 방송장악이라는 ‘거악’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있음에도 이 위원장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송의 날 축하연이 열

리는 호화로운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의 자화자찬이 낯뜨겁게 벌어지고 있을 때 외부에서는 방송의 불공정을 비판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강성남 언론노동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주장하다가 해지된 기자들이 10명이 넘고, 해지 기간도 5년이 되어 간다. 이 땅의 방송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기자들이 내쫓기는 상황에 무슨 방송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는 것이냐”고 성토했기도 했다.

제50회 방송의 날 축하연은 화려한 무대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자축하는 권력자들의 ‘미소’와 썰렁한 외부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언론 노동자들의 ‘절규’가 극명하게 대비된 행사였다. 1947년 대한민국은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호출부호 HL을 받아 주파수 주권을 확보했지만, 2013년 현재 국민의 방송주권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일본, “한국 지상파 UHDTV 배우자”

후지TV와 니혼TV, NHK미디어테크 놀로지 등 일본의 지상파 방송사와 광고사, 방송기기제조업체 등으로 구성된 현지 전문가들이 8월 27일 KBS 기술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KBS의 UHDTV 송신 및 콘텐츠 제작 등 UHDTV 전반기 기술을 참관한 뒤 일본의 UHDTV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기술 자문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KBS를 비롯한 MBC, SBS, EBS 등 대한민국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실험국 허가를 취득하여 현재 ‘세계 최초 지상파 방송망’을 이용한 UHDTV 실험방송을 실시 중이다. 또 KBS는 기술연구소의 자체 기술로 지난해 4K UHDTV 화면을 초당 30장(프레임)씩 방송하는 실험을 했고, 올 해 8월부터는 그 두 배인 60프레임을 방송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이번 일본 참관단은 이러한 KBS의 UHDTV 기술력을 살펴보고, 내년 7월 시작될 일본 UHDTV 방송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8월 27일 오전 10시 30분 KBS 기술연구소로 집결한 일본의 UHDTV 전문가들은 약 10여 분 동안 이어진 KBS의

UHDTV 기술 소개를 경청한 후 연구소 내부의 전시장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이들은 두 개의 조로 나뉘어 연구소 전시장과 실제 관악산에서 신호를 받고 있는 UHDTV가 비치된 곳을 참관하면서 KBS의 앞선 기술력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동시에 니혼TV의 유키오 소가 씨는 KBS의 UHDTV 실험방송을 참관하며 “니혼TV에서는 실험의 측면에서 스포츠 등의 UHDTV 콘텐츠를 제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KBS는 지상파 중심의 UHDTV 실험방송을 진행하고 있어 많이 놀랐다”며 “우리는 아직 UHDTV 방송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KBS는 제작을 염두에 두고 UHDTV 제작을 하고 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이처럼 앞선 UHDTV 기술로 이름을 떨치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KBS 기술연구소를 찾아 지상파 UHDTV에 대한 전문을 넓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UHDTV 발전 로드맵은 유료방송 중심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다. 물론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UHDTV 발전은 세계적인 조류를 감안할 때 일정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형 UHDTV 발전 로드맵을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의 발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콘텐츠와 플랫폼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상파 방송사가 UHDTV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다.

동시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의 UHDTV 관련 연구반 및 그와 별개로 가동되는 700MHz 대역 주파수 연구반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유료방송의 무리한 입김에 세계를 선도하는 지상파 UHDTV 기술에 걸맞지 않은 UHDTV 발전 모델이 결론으로 도출되거나 해당 기술과 관련이 깊은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배가 엉뚱한 곳으로 정해지면 심각한 후폭풍을 넘어서는 치명적인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최문기, “난시청 지원 OK, UHDTV는 글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상파 방송사 사장들을 만나 창조경제를 통한 방송산업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8월 30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지상파 방송 사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상파 난시청 해소방안 및 창조경제의 핵심과 방송의 역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 사장들의 UHDTV 발전을 위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건의에 대해서는 “매체별로 UHD 방송 여건이 달라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이 먼저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원길 한국방송협회장(SBS 사장), 비롯하여 김환영 KBS 사장, 김종국 MBC 사장, 신용섭 EBS 사장, 윤송진 OBS 사장과 지역 민영방송사를 대표해 이만수 KNN 사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방송 시설을 지상파 방송사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 제공하는 ‘방송시설 의무 제공 제도’와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건물 옥상, 입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방송보조금, 소출력중계기 등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공익사업 인정’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제반작업, 즉 법적인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디지털 커버리지에 대한 정부와 방송사의 이견이 엇보인 점은 불안요소다. 물론 두 제도의 법제화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가 담당하기로 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방송법 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제도 도입 준비가 되면 법제화 이전이라도 방송시설 의무제공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아파트의 TV 공시청설비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사실 이 부분은 직접수신을 제고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이다. 전날인 8월 29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발제에 나선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제안한 난시청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지상파 통합 서비스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 장관이 여전히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발전 로드맵과, 방송용 필수 주파수로 분류되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할당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부분은 실망이라는 분석이다. 미래부가 대한민국형 지상파 UHDTV 발전 로드맵이 세계적인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콘텐츠적 준비가 부족한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발전 모델만 고수하는 것은 심각한 패착이기 때문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도 마찬가지다. 차세대 방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당 주파수가 통신에게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 장관의 통신 제일주의는 변하지 않고 있다. 또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용 할당에 이은 산업적 효과도 따지고 보면 ‘주파수를 매각한다’는 판매의 개념에서 파생된 수익이일 뿐, 주파수의 진정한 활용도에 비춰보면 신기루일 뿐이라는 분석도 애써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8월 29일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최우정 계명대 교수가 지적했듯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보편적 미디어로서 시민이 가능한 지상파 방송에 할당하지 않고 통신에 할당했을 경우 헌법적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최 장관은 본 간담회에서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발전은 물론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할당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낼 뿐이었다.

한편 방송사 사장들은 세계 최초 유료방송의 8VSB 허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의 뜻을 보였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KBS의 UHDTV 기술이 아주 훌륭하다"(니혼TV의 유키오 소가)
 8월 27일 KBS 기술연구소를 방문하며...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UHDTV 발전 로드맵, 많이 부러우신가요?

"반드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도록 양 조직이 힘을 합칠 것"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8월 21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왜 오환이 들지?

KOBETA “시청자 위한 정책 제시”

700MHz 대역 주파수를 차세대 방송에 활용하는 방안 등 방송 업계 전반의 현안을 논의해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내놓기 위한 연구반이 발족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15층에서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과 문명석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기술 정책연구반’과 ‘방송주파수연구반’ 발족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먼저 700MHz 대역 주파수뿐만 아니라 직접수신환경 개선, 화이트 스페이스 활용, MMS, DMB, 디지털 라디오, 8VSB, 클리어캄 등 방송업계 전반의 굵직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방송기술 정책연구반’은 KBS, MBC, SBS, EBS, CBS, YTN 등 각 방송사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됐으며 간사로는 하재현 연합회 정책실장이 선임됐다.

700MHz 대역 주파수를 UHDTV 등 차세대 방송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방송주파수연구반’은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 4사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간사는 ‘방송기술정책연구반’과 동일하게 하재현 연합회 정책실장이 맡기로 했다.

현재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은 무한 경쟁 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가지는 무료보편적 서비스는 시간이 갈수록 저평가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의 절대적 가치는 시청자에게 훌륭한 미디어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플랫폼적 기능에 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연합회의 연구반 구성은 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연합회는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서 시청자를 위한 올바른 방송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양 연구반은 매달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통해 각각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공통의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최동환
 편집주간 | 김성훈
 편집위원 | 김윤중 서상원 장진영
 송주호 박명석

편집장 | 최진홍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김주욱
 기획실 | 강동균
 인쇄인 | 성전&화성프린트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트위터 |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특별다수제, ‘뜨거운 감자’ 되나



‘특별다수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방송 공정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놓고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다수제는 KBS 이사회 구조처럼 여·야 추천 비율이 정해져 ‘과반수’를 정족수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치로 과반이 아닌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상 찬성’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거나 임명할 때

공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 추천 인사로 참석한 고삼석 중앙대 교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는데 독립성 확보를 위해선 크게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방법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회 구성은 여야 교섭단체 동수 추천과 합의 추천을 함께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사회에서 사장을 추천 혹은 임명할 때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김재윤 의원도 이에 동감을 표하며 “(이사회 구성에서) 동수 추천과 함께 나머지 인사의 경우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천한다면 정치적 시비에서 자유로울 것 같다. (사장 선출 과정에서) 과반이 아닌 그 이상의 합의를 받아내는 구조로 만든다면 공정성 시비에서도 (지급보다는) 나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KBS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여야 비율은 7:4다. 일각에서는 여야 비율을 5:5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5:5 비율일 경우 찬반이 팽팽히 맞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며 서로 견제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합의 추천 방식 병행과 특별다수제 도입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다수제의 경우 결과적으로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특별다수제 도입에 따른 폐단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반대의 뜻을 표했다.

한편 KBS 노동조합은 같은 날 오후 대구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KBS 노조는 “KBS 이사회의 여야 7:4구조를 바꾸고, 특별다수제를 통한 사장 임명·제척이 될 수 있도록 방송법 46조의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정권이 사장을 임명하는 선임제도로는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지상파 3DTV, 다시 날개를 펴다

미래부 9월 중 상용화 계획 ‘술술’

지상파 3DTV가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 9월 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의 장비없이 지상파에서 3D방송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규칙 개정에 관한 내부 심사를 이미 마쳤고, 총리실 최종 규제 심사만 남겨둔 상태라고 전했다. 본지 확인 결과 실제로 미래부 차원의 지상파 3DTV 활성화 방안은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확인된다. 9월 안으로 심사가 통과되고 고시가 개정되면 한국은 지상파 3DTV의 새지평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미래부가 추진하는 3DTV 방식은 듀얼 스트림 방식이다. 지난 1월 미국 ATSC가 최초로 3DTV 국제 표준으로 지정한 기술이며, 사실상 3DTV의 정수라고 볼린다. 이에 미래부는 일반 TV를 가진 사람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2D방송을 시청하지만 3DTV를 소유한 시청자들은 2D와 3D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만든다는 복안이다. 앞으로 지상파는 좌영상으로는 MPEG-2로 압축된 화면을 보내고 우영상으로는 H.264 압축 화면을 송출해 해당

신호를 받은 3DTV가 두 화면을 합성해 3D방송을 하게된다. 현재 3DTV에 가장 열정적인 방송사는 SBS가 꼽히며, 세계 최초 3DTV 지상파 실험방송을 실시한 바 있는 SBS는 이번 미래부의 3DTV 확대 방침의 가장 큰 수혜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늦어도 11월에는 방송 송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3DTV는 방송업계의 트라우마와 같은 존재였다. 영화 아바타의 성공으로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콘텐츠 부족 및 관련 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껴도는 모습만 연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전 세계적 3D 열풍이 불 때만 하더라도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3D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산업체 100여 개에 연구개발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세몰이에 나섰지만 지금의 상황은 썩 긍정적이지 못하다. 무려 2,600개의 관련 특허가 출원 중이지만 80여 개 업체가 줄도산했으며 정부의 3D 육성정책도 취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3DTV 출하량은 2,000만 대를 넘었으며 이러한 성장세에 고무된 중국은 지난해 1월 1일 3D 채널을 시범 개통하고 현재 전국 53개 지역에 송출 중이다. 또 5년 내 약 10개 3D 채널을 추가적으로 개통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의 3DTV 기술은 사장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콘텐츠 공급 등의 문제만 적절히 해결되면 3DTV가 지상파를 중심으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에 SBS는 중국시장을 염두에 둔 3DTV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상파 중심의 3DTV 로드맵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동시에 콘텐츠 공급능력을 가진 지상파 방송사가 뉴미디어 플랫폼에 가장 적합하다는 전제로, 지상파 3DTV의 극적인 부활은 향후 UHD-TV 발전 로드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최진홍 rgdsz@kobeta.com

(1면에 이어) 물론 이번 회동의 결과물인 연구반 구성이 어떤 흐름을 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단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통신 할당을, 방통위는 약간 유보적인 방송 할당을 원하고 있으며 UHD-TV 발전에서 미래부는 유료방송 중심, 방통위는 약간 유보적인 지상파 참여로 정리된다. 이러한 이견은 향후 공동 연구반이 운영되면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으로 부각될 것이다. 공동 연구반의 성패가 미래부-방통위의 간극을 좁히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리고 양 기

관은 성공적인 물꼬를 띄웠다. 이제 조율만 남은 상황이지만, 미래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방통위가 부화뇌동할 가능성은 분명히 높은 편이다.

한편 양 기관은 방송 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금지행위 관련 사후 규제 개선 등 양 기관이 추진 중인 방송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방송 관련 행사 개최 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25일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구성된 실장급 방송통신정책협의회 및 분야별 실무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미래부와 방통위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공유기준(미래부)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방통위) 수립 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 민원은 미래부의 민원센터에서 일원화해 접수하고 방통위는 민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해 소관 민원 등을 처리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8월 21일 미래부 - 방통위 회견 종료후 주요 일문일답

Q.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108MHz 폭 중 40MHz 폭은 구 방통위가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되기로 의결했고, 아직 나머지 68MHz 폭은 아직 용도 결정 못한 상황이다. 지금 미래부와 방통위의 협의는 나머지 주파수폭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108MHz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각주-40MHz 폭은 방통위원장 고시가 아님)

A. 2012년 1월 당시 구 방통위가 결정은 사항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연구반이 발족하기 때문에 108MHz 폭 전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물론 기본 전제는 40MHz 폭 통신용 할당이다.

Q. 700MHz 대역 주파수-UHD-TV 연구반 발족 시기는?
A. 700MHz 대역 주파수는 올해, UHD-TV는 9월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단, 계획보다 빨라질 확률은 있다.

Q. 700MHz 대역 주파수 연구반의 발족이 더 빠른 이유가 있나?
A. 채널재배치가 10월에 끝난다. 그리고 LTE 주파수 경매가 종료되고 곧장 작업에 착수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겹은 있다.

Q. 700MHz 대역 주파수와 UHD-TV는 관련이 깊은데 **A.** 700MHz 주파수 활용은 방통위와 미래부의 전문 인력들이 같이 용도를 논의하는 문제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UHD-TV 방송은 전체적 산업생태계 차원의 문제인 만큼 가전산업계 이해관계자들까지 결합하는 부분이 있다. 양측의 의견을 적절하게 청취하고 취합할 예정이다. 두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적절한 협의해 나갈 것이다.

Q. 700MHz 대역 주파수 연구반은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가
A. 오는 10월에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채널재배치가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DTV 수신환경이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700MHz 용도를 결정할 것이며, 10월에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은 10월이라고 보면 된다.

Q. 700MHz 대역 주파수 연구반은 실무협의회가 있고 UHD-TV는 없다고 봐도 되나?
A. UHD-TV 방송은 기술과 콘텐츠, TV를 모두 다루르는 생태계 차원 문제이니 제조사 등 업계가

지 연구반에 다 참여하는게 맞고, 700MHz 활용 문제는 정부가 확정할 문제이니 방통위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연구반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두 분야는 약간 다르다고 본다. 또 실무협의회 구성을 소개할 때 방송통신업계라고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700MHz 대역 수요 제기는 지상파 방송과 통신사뿐 아니라 재난망 관련 기관이나 코레일 등에서도 요청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관련 공공기관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 역할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Q. 700MHz 연구반에는 사업자가 빠졌고, UHD-TV에는 있는데 이유는 뭔가.
A. UHD-TV와 700MHz의 연구반 취지가 다르다. 주파수는 전문가들과 양 기관이 논의하고, UHD-TV는 산업측면에서 가전사나 이해관계가 있는 지상파 방송사, 유료방송 업체 등을 부르게 된다. 단 700MHz 용도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미래부가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올려 최종확정하는 것이니 연구반 대신 실무반에 업계가 참여토록 하자는 취지다. 큰 줄기에서 차이점은 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IPTV 가입 ... ‘결합상품 때문에’

IPTV를 시청하는 이유가 다양한 채널보다는 인터넷 통신과의 결합 상품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간한 ‘KISDI STAR Report-IPTV 이용 형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IPTV 가입 가구 중 38.1%가 ‘인터넷 등과 결합 상품 구성 때문에’ IPTV를 계속 시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가입 가구 32.7%가 응답한 ‘채널이 다양해서’라는 이유보다 더 높은 수치로 소비자들은 IPTV와 결합되어 있는 인터넷 통신(85.9%), 인터넷 전화(55.65%), 휴대폰(25.1%) 등의 서비스 때문에 IPTV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ICT통계센터 정용찬 연구원은 “최근 3년간 유료방송 가입 가구 추이를 살펴본 결과, 유선방송(종합유선+중계유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위성방송과 IPTV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IPTV 가입 가구의 경우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결합상품으로 인해 IPTV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IPTV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성장하는 만큼 가입과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소비자 민원도 제대로 파악해 시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최근 IPTV 결합 상품을 중도 해지 하는 과정에서 가입할 때 제대로 듣지 못했던 위약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원치 않는 서비스를 만료일까지 억지로 유지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IPTV의 경우 약정할인 형태의 결합상품이 많은데 이러한 상품은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에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전부 내놓는 ‘할인반환금’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오래 이용할 수록 물어내야 하는 총액이 크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각각의 유료방송은 가입 과정에서 위약금 산정 문제를 상세히 안내하고, 고지서에 상세히 기록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지 이유를 조사한 결과 IPTV에 가입해서’라는 비율이 유선방송의 경우 47.9%, 위성방송은 27.3%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 이와 반대로 IPTV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지 이유를 조사한 결과도 ‘유선방송에 가입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로 가장 높아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8VSB, 예정된 논란

케이블 SO에 대한 8VSB 허용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10월 연구반을 가동해 ‘전력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자 방송사업자들의 불만도 조금씩 고조되는 분위기다. 논란의 단초는 케이블 SO에 8VSB를 허용했을 때 전체 방송시장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분석 때문이다. 우선 케이블의 생애과도 같은 다양성의 훼손이다. 당장 케이블 SO에 8VSB가 허용되면 일부 케이블 PP는 퇴출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기존의 QAM 방식보다 전송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기치로 내건 케이블 방송의 기본정신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셈이다. 그런 이유로 PP들은 케이블 SO의 8VSB 허용에 꾸준히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만약 8VSB가 허용되면 그 대상은 비닐 닫합 TF까지 조직해 대응한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보도전문채널 2개사가 선정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4개 채널을 넣을 수 있는 QAM 대역폭에 1개만 넣을 수 있는 8VSB 대역폭을 감안하면, 총 6개 방송사가 8VSB의 혜택을 얻는 순간 24개의 PP가 퇴출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70여 개의 케이블 PP 중 약 40%에 육박하는 수치다. 그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8VSB 허용이 아닐라고 케이블 가입자의 유출을 막고 흡소핑 송출로 등을 포기하지 못하는 케이블 SO와 자사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종편과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특례라고 주장한다. (압축방식에 따른 가용채널수는 MPEG-2 기준 8VSB SD 3개, HD 1개가 가능하고 QAM은 SD 6~8개가 가능하다. 또 MPEG-4 기준 8VSB는 셋톱박스 없으면 불가능, QAM은 HD 4개만 가능하다)

게다가 케이블 SO의 8VSB 허용에는 클리어팜 TV와 비슷한 비판, 즉 ‘절류발이 디지털 전환이라

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케이블 SO의 8VSB 허용은 단순히 화질만 개선시킬뿐 디지털 전환의 정수인 양방향 서비스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케이블 SO가 자사의 가입자 유출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합당한 비용을 치르는 대신, 단순히 화질개선만 내세운 미봉책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참고로 구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의 정의를 고품질 화면, 다채널, 양방향에서 찾은 바 있다. 여기에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료방송의 8VSB 허용은 명백한 특례라는 비판은 물론, 보안모듈 등 콘텐츠 보호방안이 미비해 간신히 자리를 잡아가는 콘텐츠 유통시장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상존한다. 또 시청자가 기존의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과 비슷한 비용으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유료방송 산업의 고질적인 저가 콘텐츠 고착화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케이블 SO의 8VSB 허용을 두고 방송사업자들은 함중연영을 거듭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비율이 낮으며, 향후 자신들의 자본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뤄낼 의지가 없는 케이블 MSO와 MPP는 찬성 입장이며 고화질 방송으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종편도 케이블 SO의 8VSB 허용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퇴출위협에 몰린 군소 PP는 반대 입장이며 디지털 전환을 일정 정도 준비한 일부 MSO도 조심스러운 반대입장을 지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구체적인 답변을 보이는 것에는 미온적이나 종편 특례라는 큰 틀 안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5면에 CPS와 관련된 기획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KT 이석채 회장,국정감사?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직원들의 연이은 죽음과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KT가 옛 국가안전기획부 간부들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해 고액 연봉을 청거준 사실까지 드러나자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는 분위기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8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채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낙하산 집합소’와 ‘죽음의 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KT에 실제 몇 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는지,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또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밝히라는 주장이다.

동시에 집회 참가자들은 “KT는 ‘살인적 노무 관리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여덟 명의 KT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과

로사 등까지 합하면 일주일에 한 명 꼴로 전현직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전해하며 “(모든 사태의)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석채다. 이석채가 KT 회장으로 온 뒤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하면서, KT그룹에선 2009년 34명, 2010년 41명, 2011년 43명, 2012년 56명이 숨지는 등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KT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지난달에는 사상 처음으로 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KT 사유화와 살인적 노무 관리 실태를 낱알이 밝히기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여러 의원과 함께 개최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KT 이석채 회장의 조기 사임을 종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진별 jnb1001@kobeta.com

분석

통신사 속도경쟁에 피멍드는 공공재

속도 제일주의에 빠진 그들, 자력이 있다

대한민국 이동통신의 역사는 곧 속도의 역사였다. 1세대 아날로그 음성통신에서 시작된 거대 통신 3사의 경쟁은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느냐’에 맹목적으로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 속도가 대한민국 이동통신의 역사를 관통할 만큼 절대적이고 중요한 사안일까. 이런 의문에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 밖에 없다. 이상하기 때문이다. 속도 외에도 중요한 가치는 엄청나게 많을텐데, 아무리 훌륭한 8차선 고속도로를 뚫으면 뭐하나. 불개이트 비용이 10만 원이고 유지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심지어 튼만 나면 고속도로 위에 고가도로를 만들어 기존의 고속도로 이용객을 무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속도 지향주의’의 폐해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지금 대한민국 이동통신은 가히 속도 전이다. 사실상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것에 사활을 걸었다. 5:3:2의 시장 점유율을 흔들기 위해 ‘5’의 선택도 속도, ‘2’의 선택도 속도다. 이런 상황에서 그 속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주파수는 낭비가 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다른 영역의 주파수까지 모두 끌어모아 자신들의 속도를 더욱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으며 정부부처는 ‘웬다구냐!’라며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일은 없다. 그저 속도만 있을 뿐’

최근 통신사들은 LTE-A 서비스를 내세우며 속도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 ‘속도’라는 것이 통신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가치일까. 이 대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오히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통신사의 속도전을 ‘돈 벌이 수단’, 즉 가입자 세뇌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런 식이다. 통신사는 ‘기존 속도는 10이지만, 우리의 차세대 속도는 20이에요!’라고 외친다. 하지만 실제 속도는 11. 여기에 차세대 속도라는 명목으로 기존 속도를 누리던 가입자들은 완벽하게 배제시킨다. 그 와중에 ‘사실 우리는 10이 아니라 8이었어요, 죄송해요’라는 말도 뻔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소비자 우용이다. ‘넌 나에게 3G를 줬어’라는 광고 카피는 엄격히 말하면 처

벌대상 갑인 셈이다. 지금까지 소비자를 속였다는 사실을 고해성사한 용기를 인정해야 하나. 애매한 부분이다.

통신사들이 강조하는 속도, 즉 데이터 속도는 사실 이동통신 상품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적당한 데이터 속도와 더불어 안정적인 서비스와 납득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야말로 진정 통신사들이 추구해야 하는 지향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는 무조건 속도 경쟁만 불사하고 있다.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속도에만 목을 매는 것이다. 대형 마트가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도 막상 추가적인 투자를 배제한 채 직원들을 ‘감정 혹사’의 극치로 몰고가는 현상과 비슷하다. 확실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전반적인 통신의 발전과 합당한 가격 경쟁력을 유도하기는커녕 마냥 ‘속도만 부르는’ 통신사. 확실히 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속도 제일주의 통신사들이 그 속도를 위해 국민의 재원인 주파수를 맹목적으로 탐낸다는 것에 있다. 통신 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 요소요소에 투자를 하기 보다는 그저 막대한 금액을 통한 주파수 확보에만 목을 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 대한민국은 통신 주파수 올인의 시대가 되어 버렸다. 국방부가 쓰던, 위성 DMB가 활용하던, 와이브로가 쓰던, 방송이 쓰던 모든 주파수는 통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일까.

사실 모든 결론은 아주 간단하다. 통신은 이제 더 이상 속도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러면 통신 경쟁력은 착실히 상승할 것이고 그와 연계된 주파수 수급도 원활하게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주파수 경매에 목을 뺐던 통신사들의 귀에 이런 충언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 그저 ‘속도를 위해!’ 그들은 거짓말도 불사하고 막대한 돈을 가입자에게 털어 경매에 쏟아붓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칼럼] 위기의 최문기 미래부 장관 조직 장악과 최 장관의 고민

최근 기자들 사이에서 묘한 농담이 유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암,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사부’라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방송정책의 이분화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는 등 태생부터 요란했던 방통위와 미래부가 막상 ‘투쟁’을 열어보니 의외로 조용한 상태’라는 점을 비튼 농담이다. 물론 최근 장관과 위원장의 전격 회동을 통해 700MHz 대역 주파수 및 UHDTV 연구반을 공동하기로 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긴 있지만 창조경제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양 조직은 규제완화 및 대책없는 수평규제만 남발할 뿐 그 이름값을 못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심지어 규제완화와 수평규제에도 특혜논란이 불거지며 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 중에서 정치인 출신 친박 실세로 꼽히는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이 긍정적인 산업효과에 대한 역할론을 배제한다는 전제로 나름의 정치감각을 뽐내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을 둘러싼 상황은 묘하게 꼬이고 있다. 거대 공룡부처의 수장으로서 한창 막강한 파워를 자랑해야 하는 최 장관이 우호적이지 않은 주변 분위기에 휩쓸린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기 때문이다.

우선 업계의 분위기다. 당장 미래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은 통신사들은 LTE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정부부처인 미래부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는다. 물론 그들이 반드시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미래부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차치한다고 해도 통신사들은 현재 미래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의식하지 않거나, 혹은 커다란 기대를 거는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KT가 노동조합을 동원해 집단 행동에 돌입했을 때 미래부가 보여준 반응을 복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통신사에 막대한 징계를 내린 방통위가 소위 ‘더 막한다’는 표현을 쓸 정도다.

이런 분위기는 8월 26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분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개소식에

서도 재현됐다. 당시 최 장관은 정부 출연 연구소 중소기업 지원을 최대한 실시하며 인건비도 100% 지원하겠다는 장밋빛 약속을 꺼내 들었지만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부족하다’는 말과 더불어 호된 질책만 남발했기 때문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미래부가 실시하는 정책을 업계 관계자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조직 장악력 문제도 있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8월 초 전격 경질된 최순호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관련 조직 장악력의 부재를 이유로 꼽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일정 정도 예견된 부분이다. 시간을 돌려 미래부 장관 임명이 이뤄지던 때로 가보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 미래부 장관에 김중훈 알카텔 루슨트 벨 연구소 사장을 임명한 바 있다. 그리고 최 전 수석과 김 내정자는 소위 코드가 맞는 해외파 인사로 분류되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김 내정자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며 낙마해 버렸으며 이러한 김 내정자의 장관 낙마가 최 전 수석의 창조경제 개념 정립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러한 타격은 조직 장악력의 부재로 이어졌으며 결국 최 전 수석은 그 외 몇 가지 사유를 더해 미래전략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하지만 이어 등장한 윤창범 미래전략수석이 김 내정자의 뒤를 이어 미래부 수장 자리에 오른 최문기 장관의 조직 장악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적다. 물론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 참여한 데다 소위 ‘코드가 맞는 인사’이긴 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최 장관이 등장하는 모양새가 걸림돌로 남아 있다. 최 장관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박 대통령이 극찬을 아끼지 않던 김중훈 내정자의 후임으로 미래부 수장의 자리에 올랐다. 당장 ‘김중훈 대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자리에 오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스로 청와대의 미래전략수석이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워졌다고 해도 ‘면이 서지 않는다’는 평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고스란히 조직 장악력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 장관의 태생적 한계가 현재의 조직 장악력 부재를 일으키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는 공룡 부처가 보여주는 치명적인 단점, 즉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해야 하는 미래부의 특성이다. 실제로 미래부는 1, 2차관 산하에 창조경제의 명목으로 방대한 영역을 품고 있다. 가끔 미래부에서 도착하는 보도자료를 보면 황당할 때가 있을 정도다. 어느 날은 원자력과 관련된 자료가 도착하더니 다음날은 케이بل 정책, 그 다음 날은 중소기업 지원과 위성 정책까지. 이는 미래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로서, 모호한 창조경제의 이념을 중심으로 잡다한 정책을 하나로 모아 콘트를 타워를 만들 수 있다는 헛된 장밋빛 전망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최 장관 본인의 문제다. 최 장관은 잘 알려졌지만 ETRI 원장 출신이다. 정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의 단체장이 하루아침에 중앙부처 장관이 된 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무원 사회는 의외로 경직되어 있으며 동시에 권위적이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최 장관의 등장은 초반부터 탐탁지 않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조직 장악력 부재로 이어진다. 물론 을, 병의 위치에서 순식간에 장관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해 조직을 장악하는 경우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진대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 장관은 진 전 사장만큼의 장악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평이다.

지금 미래부는 총체적 난국이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정립해야 하는 최전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미래부의 과장급 중에서는 업무 특성상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방송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의 파악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최 장관은 홀로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지만 손과 발이 되어 주어야 하는 ‘조직’은 이미 영혼 없는 리엑션만 남발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방송정책만 보더라도 단순히 수평규제 및 동일규제의 틀 안에서 특혜성 정책만 남발되고 있고 실효성 있는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는 방통위와의 교집합 영역에서 표류하고 있다. 최 장관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이경재 위원장, 산타클로스로 변신하다 “지상파 MMS, DCS, 8VSB 전격 허용”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상파 MMS는 물론 위성방송의 숙원사업인 DCS, 종합편성채널의 비원인던 8VSB 등을 전격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여전히 확고하며, KBS의 광고 폐지에 대한 찬성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사안은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긴데다 역차별 논란, 여기에 특혜시비까지 일고 있어 잠음이 예견된다.

8월 20일 이 위원장은 한국TT리더스클럽이 주최한 조찬회에 참석해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 방송 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최소화시키고 각 방송 사업

자가 원하는 무대를 조성에 대응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각 방송사업자의 갈등도 동일한 규제 완화, 즉 수평규제의 틀 안에서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이에 이 위원장은 종편 4사의 비밀 TF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앓은 8VSB 허용에 대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의 측면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른 종편 특혜 논란과 다른 방송 사업자의 이견은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DCS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전하며 조만간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DCS의 경우 케이블의 반발이 막강하긴 하지만 최근 흥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조금씩 전격적인 허용으로 가닥이 잡혀가던 중이었다. 물론 방통위도 지속적인 연구반 가동을 통해 법리적 운신을 넓혀오고 있다.

문제는 지상파 MMS다. 이 위원장의 발언을 복기하면 8VSB 및 DCS 허용 등은 케이블(종편)과 위성방송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상파 MMS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 규제 완화 및 수평규제의 틀 안에서 모든 방송 사업자들의 비율을 풀어주면 이 위원장이 유독 지상파 MMS에 대해서는 묘하게 어긋나있기 때문이다. 당장 역차별 논란도 나올 기세다.

이 위원장은 당시 조찬회에서 지상파 MMS는 KBS와 EBS에 잘 적용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무료 미디어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틀 안에서 지상파 MMS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이 위원장은 EBS의 지상파 MMS 확대를 통해 1차적인 정책 추진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현재 지상파 4사가 원하는 지상파 MMS와는 기본적인 전제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상파 MMS 방식 선정 및 각 지상파 방송사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수신료 2,000원 이상을 거둬 강조하며 KBS 광고 폐지 입장을 재차 확인했으나 그에 따른 유료 방송 지원에 대한 의혹은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또 새누리당 흥문종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중 DCS 허용과 더불어 모든 유료방송의 가입자 점유율 제한을 3분의 1로 통일한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던 위성방송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한편 이 위원장의 본 발언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공조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이들은 “방송 사업자의 규제 완화를 통해 각 사업자의 불만을 잠재우고 시청자 편익을 추구한다는 방침은 훌륭하지만 과연 역차별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장기적인 플랜이 반드시 등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단신뉴스

지상파 방송4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이하 DTV KOREA)’는 26번째 KBS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는 원로 방송인 송해 씨를 지상파 직접수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송해 씨는 앞으로 DTV KOREA가 제작하는 지상파 직접수신 홍보 공익광고에 출연하고 관련 행사에 참여해 지상파 직접 수신을 홍보하게 된다.

DTV KOREA 측은 “앞으로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인데, 우선 실내 안테나를 이용한 직접수신을 홍보하는 공익광고를 오는 10월 초순 채널 재배치 기간을 전후해 KBS, MBC, SBS, EBS 등 4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한편 기존의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공사청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 직접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공사청 지원 사업’은 DTV KOREA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DTV KOREA의 지원 전까지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분명치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공사청 시설 지원이 부진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9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 2013에서 UHDTV를 둘러싼 제조사들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돋보이는 쪽은 역시 삼성전자. 한동안 역점을 두고 개발했던 OLED TV보다 UHDTV에 방점을 찍은 전사를 통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제조사로 발돋움하겠다는 복안이다. 물론 대형 OLED TV 전시회를 통해 해당 기술력을 가감없이 뽐낸다는 계획이지만 차세대 방송의 흐름이 UHDTV로 흘러가고 있음을 감안해 주요 라인업은 UHDTV를 중심으로 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급형 UHDTV 기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맞서는 LG전자도 UHDTV 중심의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IFA 2013 현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삼성전자보다 UHDTV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평을 받는 LG전자는 아직 구체적인 라인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준의 UHDTV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LG전자도 OLED TV에도 상당한 공을 들인 만큼, 이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편이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는 제5회 ‘2013년 클린콘텐츠 공익 캠페인 UCC 콘텐츠 공모전’을 10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모전은 클린콘텐츠 공익 캠페인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공모전은 유해 콘텐츠의 무분별한 확산을 예방하고 창조경제 시대 스마트사회에 건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발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응모자격은 스마트시대에 클린콘텐츠에 관심있는 초·중·고·대학생, 일반인, 단체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안전행정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상,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상, 서울시 교육감상 등 주관기관과 기관장상, 총장상, 최우수상 등 40여개의 성과 3,000만 원 상당 시상금이 제공된다. 공모전 발표대회와 시상식은 11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주옥 kjo5554@kobeta.com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채널의 주주구성 및 변동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민연련은 “종편이 허술한 종편 승인 심사를 악용해 편법·탈법으로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는 증거

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방통위는 종편 승인과 승인장 발부 이후 드러난 주주구성에 대한 편법탈법 등의 의혹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주주부처인 방통위가 책임을 지고 종편 주주구성과 변동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선터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는 방통위로부터 받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장 교부 당시 변경된 주주명단의 변동 사항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TV조선, JTBC, 채널A 등이 승인 기준의 허술함을 악용해 상식을 벗어난 주주 구성 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승인 신청 당시 출자를 약속했던 법인주주가 승인장 교부 시점에는 출자를 취소해 평균 25%의 주주가 바뀌었고 심지어 채널A는 40% 이상 변경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연련은 “주주변경뿐 아니라 주요 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조끼기 출자’를 유지하는가 하면 부실 저축은행 사당수가 출자를 했으며 실체가 불분명한 ‘불법자금’도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종편 승인 심사과정에서 방통위가 요식행위, 직무유기를 한 것하기에 방통위가 현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제기된 주주구성 의혹 및 종편 승인장 교부 이후 현재까지 주주 변경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엄격한 직권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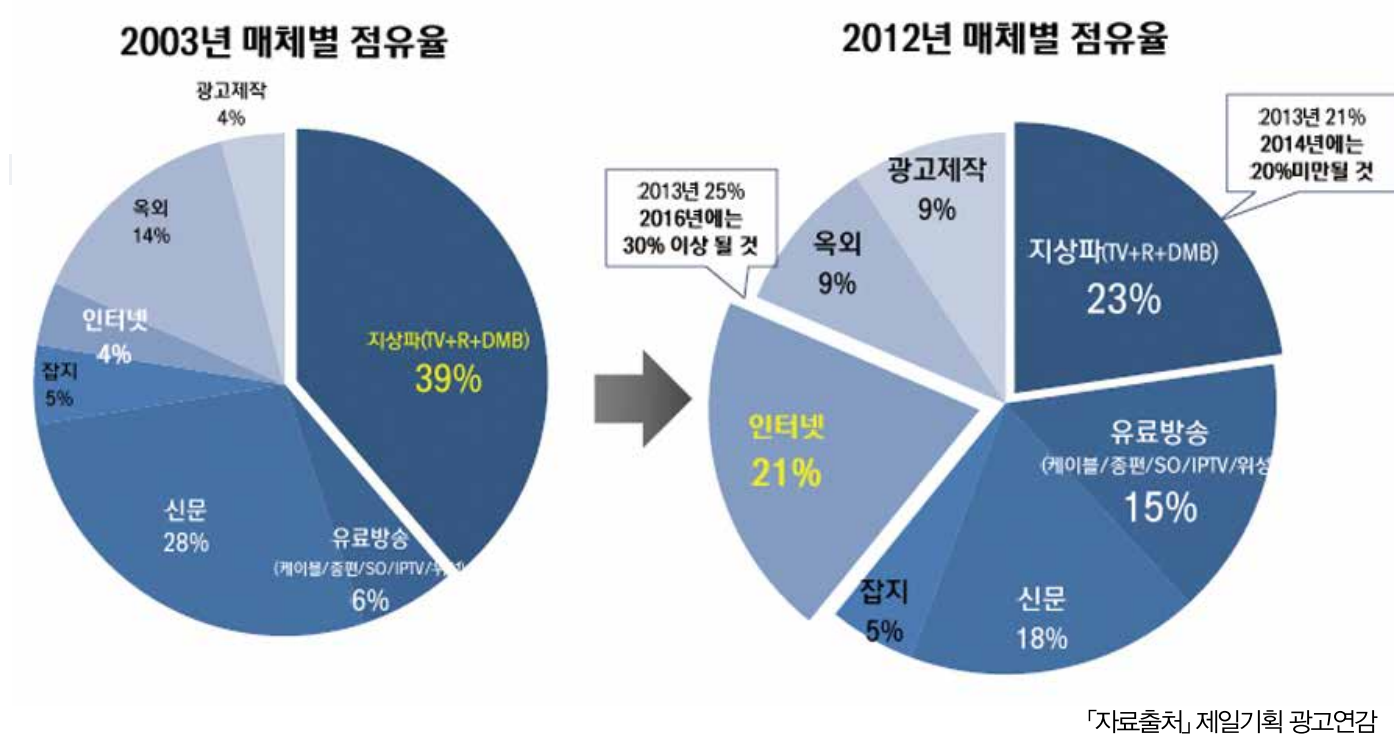
도로교통공단은 경북교통방송 설립허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TBN교통방송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북, 제주 교통방송 설립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이미(가칭)충북교통방송을 설립하고자 관련기관과 방송설립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모바일 시대, 지상파 방송사의 선택은?

권 철 MBC 뉴미디어사업부 부장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가 온통 지상파가 어렵다는 얘기 일색이다. 돌이켜보면 지상파 방송 위기론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부침이 심한 국내의 경제상황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광고시장 변화는 이를 주 수입으로 하는 방송사들에게 위기를 안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한 방송사들의 노력 또한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상파 방송은 위기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온다. 결국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대안 마련, 실행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일 게다. 구성원들에 대한 적당한 위기의식 주입을 위한 구조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실천이 담보되는 수익구조의 틀을 고민할 때다. 95년 유료방송 출범, 2011년 종편채널 출범 등 지상파 방송을 위협하는 산업구조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방송광고시장에서의 지상파 비중은 몇 년 간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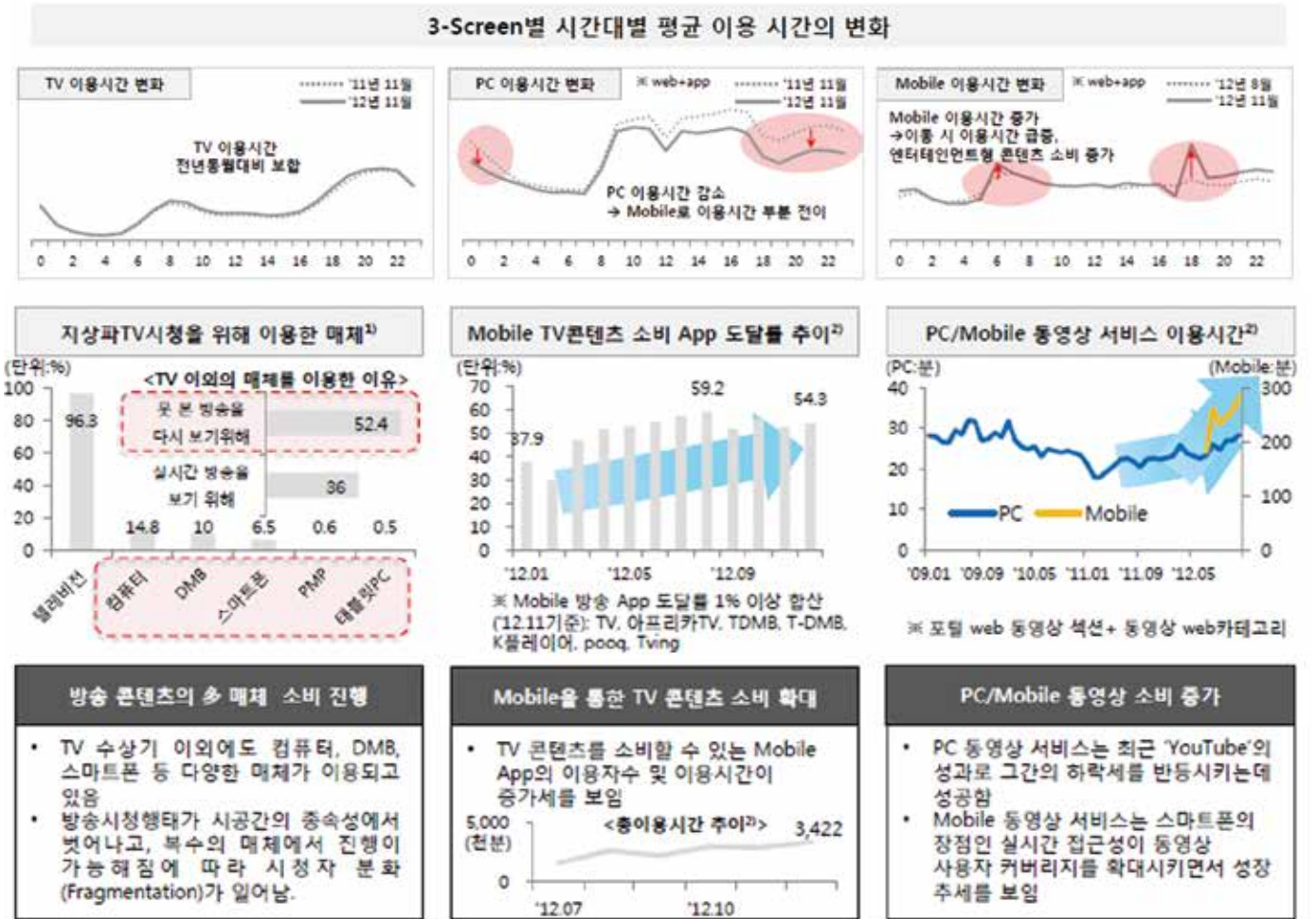
여기에 미디어 소비의 기술적 장애물이었던 네트워크의 속도, 화질, 이동성은 LTE 중심의 이동통신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의 폭발적 보급으로 미디어 이용행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제는 전통적인 TV 중심의 미디어 이용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로의 전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들의 수익구조를 인터넷 모바일 영역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C(Content), P(Platform), N(Network), D(Device)로 구분되는 미디어산업 구조는 이제 수직결합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거대 통신사들이 콘텐츠 제작, 유통, 광고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기능을 특화시키고 있으며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경쟁력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던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플랫폼 경쟁력과 콘텐츠 경쟁력을 융합한 형태로의 수익구조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런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가 만들어낸 서비스가 pooc이다. 지상파 방송의 모든 콘텐츠를 이 플랫폼으로 특화시켜 유통함으로써 플랫폼 경쟁력을 꾀하고 N-스크린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유통경로 다변화를 통한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모델이다.

모바일 영역에서 TV콘텐츠 소비에 주목해야

미디어 소비행태는 변하고 있다. TV이용시간은 정체되어 있고 PC 이용행태는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 이용시간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30대 기술수용도가 높은 젊은 층의 미디어 소비행태가 모바일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모바일 환경에서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실시간 시청하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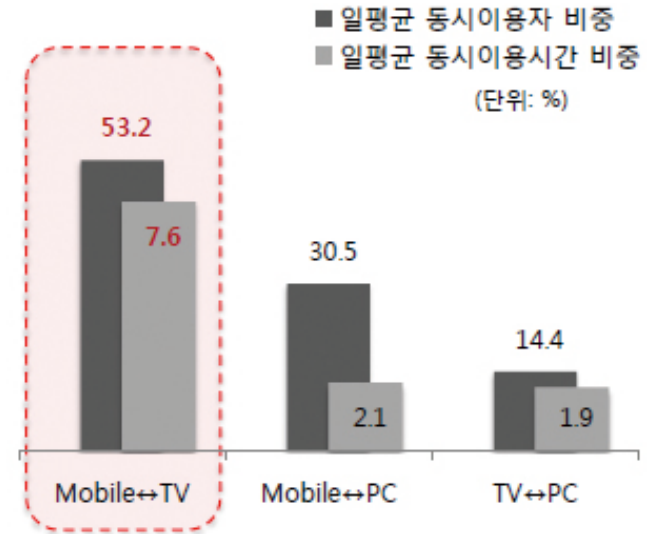


한 방송을 다시보기 위해 이용하는 행태가 50%가 넘는다는 것은 방송 콘텐츠가 모바일 영역에서 사업모델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TV, 스마트 기기 동시 사용 환경에 주목해야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와 스마트화는 사람들이 단순히 방송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방송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고 프로그램 속 장소, 상품,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 하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버렸다. 모바일을 이용한 시청자 간 실시간 소통과 상호작용 요구가 크다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 입증되었지만 아직 이런 시청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모델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TV+모바일에서 콘텐츠를 유통하고 소통하는 형태의 사업모델 발굴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는 구조가 아닌 변화를 읽고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뉴미디어 사업의 핵심이며 지상파 방송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미디어 레퍼토리별 동시 소비량



[분석] 8VSB 논란과 지상파 콘텐츠 활용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대비하는 다양한 방송 사업자의 이해관계

케이블 SO의 8VSB 허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본지에서도 해당 부분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지만(관련기사 : 8VSB, 예정된 논란) 8VSB 허용 문제는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을 뿌리까지 뒤흔들 뇌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인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관련 업계와 언론에서는 케이블 SO의 8VSB 허용 문제를 두고 한시적인 접근방법, 즉 케이블 SO의 8VSB 허용에 따른 종합편성채널 특혜와 군소 PP의 퇴출 등으로 대표되는 직접적인 사안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미디어 시장 전반으로 끌어오면 더 무서운 변수가 자리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케이블 SO의 8VSB 허용 문제를 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케이블 SO의 8VSB 허용을 두고 대립전선은 명확한 편이다. 일차적인 기준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를 얼마나 진행했느냐다. MSO를 비롯해 MPP, 여기에 군소 SO와 PP 모두 고화질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얼마나 충실하게 지원했느냐로 8VSB 허용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이차적 기준은 군소 PP 생존의 문제, 삼차적 기준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영향력 확대 여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케이블 SO의 8VSB 허용 문제가 콘텐츠와 관련된, 즉 이차적으로 지상파 콘텐츠를 가공하는 유료방송의 이해관계가 얹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안을 약간 비

틀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케이블의 8VSB 허용을 반대하면서도 내심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위성방송 및 IPTV의 태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위성방송 및 IPTV는 케이블 SO의 8VSB 허용에 대해 분명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안과 여러모로 비슷한 클리어캡 TV 출시를 두고 위성방송과 IPTV가 우려의 뜻을 내보인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조는 8VSB 허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케이블 SO 특혜(종편 특혜)라는 관점에서 위성방송과 IPTV는 일정 정도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반대의 기조가 만약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혜택이라면 언제든 180도 달라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위성방송 및 IPTV 업계에서는 수평규제의 큰 틀 안에서 자신들도 8VSB 허용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8VSB 허용 문제는 더욱 본질적인 질문으로 파고든다. 정리하자면, 케이블 SO의 8VSB 허용을 두고 다른 유료방송들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두고 각자의 정의들이 맹렬하게 충돌한다는 뜻이다. 상황은 이렇다. 유료방송은 지상파 방송 콘텐츠 서비스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그리고 유료방송 전체에 대한 8VSB 허용 문제는 결국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재송신을 기존의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끌어올리는 문제로 격상된다. 8VSB 허용 문제에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활용하는 유료방송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케이블 SO의 8VSB 허용 문제가 전체 유료방송의 목적으로 굳어질 공산이 크며, 만약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최소한 유료방송은 자신들의 서비스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것이 역무침해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말이다.

현재 케이블 SO의 8VSB 허용은 케이블 SO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유료방송의 8VSB 허용으로 변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케이블 SO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료방송 플랫폼은 케이블의 8VSB 허용을 반대하지만 만약 이러한 특혜가 자신들에게 주어지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료방송의 핵심 서비스인 지상파 콘텐츠 미디어 서비스도 격랑을 일으킬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SO 사이에 체결된 CPS 과금 대상은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에 한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 SO에 8VSB 방식이 허용되면 아날로그 가입자도(비록 절름발이지만) 고화질 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날로그 가입자는 CPS 과금 대상에서 빠지면서도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에 준하는 미디어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아날로그 케이블 입장에서는 고화질 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니 긍정적이지만, 지상파 콘텐츠는 그 만큼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격이다. 엄연히 케이블 SO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투자로 행해져야 하는 서비스가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회생으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고품질 지상파 콘텐츠 사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상해보자. 위성방송과 IPTV도 이러한 전환을 따르지 말라는 법이 없다. 손 안 대고 코를 풀려는 생각은 누구냐 하는 법이다.

단언컨대, 케이블의 8VSB 허용은 명백한 케이블 특혜다. 자신들의 정당한 투자로 행해져야 하는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를 포기하고 전 세계 유려없는 케이블 8VSB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차라리 정부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3조 원 규모의 자원을 요구할 때가 뻔뻔하지만 더 현실적이다. 여기에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고화질 서비스를 위한 24개 군소 PP의 퇴출 가능성과 케이블의 근원적 가치인 다양성의 부정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지경이다. 또 진정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도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대한민국은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미디어의 조류에 몸을 실었다. 동시에 다양한 방송 사업자의 이해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부분은 미디어의 플랫폼적 성격을 정의할 때 정보의 격차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료 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디지털 정보격차를 좁힌다는 망상에 빠지면 곤란하다.

여기서 8VSB 허용 문제가 전체 유료방송으로 변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료방송은 시청자의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열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유료방송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사라지고 지상파 콘텐츠의 회생 가능성만 농후해진다. CPS 과금 대상의 재설정을 포함한 재송신 계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은 물론, 지상파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게기가 바로 케이블의 8VSB 허용 논란의 시작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최 진 홍 방송기술저널 편집장

지상파 플랫폼 정책에 대한 제언

문 명 석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 부회장 / KBS 방송기술인협회 회장

올 초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송담당 부서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이원화되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인허가에 관련된 규제를 미래부는 유선방송과 통신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및 지상파 방송의 기술기준 제·개정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방송정책 관련 주요 현안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방통위와 미래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클리어퀵(Clear QAM) 허용 △8VSB 허용 △지상파의 무재전송 범위 확대 △지상파 다채널 허용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방안 논의라 할 수 있다. 미래부가 유료방송 진흥을 위해 규제완화를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방통위는 지상파 진흥을 위한 규제완화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도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방송정책 현안들은 하나같이 정부, 지상파, 유료방송(케이블, 위성, IPTV) 사업자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해법을 찾기도 어렵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각 현안에 대한 의미, 쟁점사항과 사업자별 입장에 대해 살펴보면서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본고의 표기 방식은 필자가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플랫폼 정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이슈가 되는 주요 방송정책 현안들은 하나같이 유료방송 부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부(방통위, 미래부)의 친 유료방송 종합정책세트라고 볼로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다. 방송 본연의 공익성, 공공성은 상실되고 정부가 전 국민을 유료방송으로 가입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의심케 한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안일함도 한 몫을 하고 있었다. 지상파 방송사는 그 동안 콘텐츠 중심의 정책만 추진하 다보니,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직접 유통시킬 수 있는 자사 플랫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면이 있다. 그 결과 지상파 콘텐츠 유통망을 유료방송이 장악하여 지상파 방송 플랫폼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상파 방송의 플랫폼 경쟁력 약화는 구정보통신부의 지상파 DTV 방송표준을 미국방식(ATSC)으로 선정(1997.11)할 때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이다. 그 당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은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을 무시하고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등을 통해 약 5년간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 댓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작년 말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디지털 전환 비용인 수천억 원 대의 차입금과 난시청에 따르는 주파수 부족문제, 직접수신 가구의 하락 등으로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했다.

플랫폼간의 경쟁 2라운드 : 클리어퀵, 700MHz 주파수 대역

주요 방송정책 현안에 대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 위성, IPTV) 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방송이 보편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시청취자간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청취자의 복지를 확대한다는 본연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간 갈등 해소의 첫 출발점을 시청자를 위한 정책적 고민에서부터 삼아야 한다. 지상파는 플랫폼사업자인 동시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기 때문에 유료방송과 경쟁관계에 있어 상황이 더 복잡해 보인다. 다음 [표]를 통해 지상파가 처해 있는 유료방송과의 경쟁관계를 살펴보자.

[표 1] 지상파와 유료방송과의 경쟁관계

구분	플랫폼 경쟁	콘텐츠 경쟁
사업자	지상파(K,M,S,E) ↔ 유료방송(케이블, 위성, IPTV)	지상파 ↔ 케이블, 종편
방송정책	- 지상파 무료 다채널 ↔ 다채널 케이블 방송(클리어퀵) ⇒ 케이블의 클리어퀵 요구에 지상파는 다채널 요구 - 지상파의 유료 재전송 확대 ⇒ 유료방송과의 경쟁 700MHz 대역 주파수 ⇒ 통신사업자와의 경쟁	8VSB : 케이블 아날로그 방송에서 지상파 DTV 전송 방식인 8VSB를 허용, 종편의 SD화질을 HD로 가능하게 하여 지상파와 경쟁관계 구도 형성(지상파, 종편 간 콘텐츠(광고) 경쟁 예상)

[표 1]에서 보듯이 지상파와 유료방송과의 플랫폼 경쟁은 크게 △지상파 무료 다채널과 다채널 케이블방송(클리어퀵) △700MHz 주파수 대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클리어퀵(Clear QAM)에 대해 알아보자

퀵(QAM)이란 케이블 방송에서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기술표준이고, 클리어퀵(Clear QAM)은 퀵을 없앴다는 뜻으로 도시청(盜視廳)을 예방하는 CAS 등의 인증시스템을 제거하고 TV수상기 안에 셋톱박스를 내장해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방식이다. 셋톱박스 비용이 빠져 저렴하게 디지털 케이블TV를 볼 수 있지만, 채널은 지상파와 보도·공공·종교 등의 일부 채널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2012.10.)과 디지털 전환 활성화 특별법(새누리당 김장실 의원, 2012.12.28. 입법 발의)에 포함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미래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에서는 케이블의 클리어퀵 정책허용을 표면적으로는 사업자 자율에 의해 추진기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금년 8월 중 미래부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조정 등 행정업무 지원은 물론이고 셋톱박스 사업자 공개입찰을 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클리어퀵이 케이블 사업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계류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이 IPTV·위성방송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아 케이블 가입자 규모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홈쇼핑 전송료 수입을 얻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저가형 케이블 상품의 고착화를 초래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우려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상존하고 있다. 클리어퀵 보급대상 가구 수는 전체 저소득층 156만 가구의 10% 인 16만 가구 정도로 케이블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상품가격은 기존 아날로그 가격 수준으로 예상된다. 아날로그 가격이 대략 5천 원에서 6천 원이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30% 정도 할인받으면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미 미국에서도 클리어퀵이 규제 형평성의 문제와 도시청의 이유로 지난 2012년 폐지된 제도라는 점이다.(2013.7.19. 클리어퀵 도입에 관한 워크숍 중, KT 스카이라이프 노준택 팀장)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다채널 지원 방법으로 무료 기반의 지상파를 지원하는 하는 것이 우선이지, 유료방송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 위성방송이나 IPTV사업자도 케이블TV로만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케이블 업계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구해야 하고, 저소득층 아날로그 가입자들이 위성, IPTV로 옮길 수 있는 매체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7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살펴보자

대상 주파수는 현재 방송용 채널 52 ~ 69번(698MHz ~ 806MHz : 108MHz)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로, 차세대 방송을 할 수 있는 지상파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주파수 대역

[표 2] 클리어퀵 허용 여부에 따른 지상파, 케이블, 위성/IPTV 사업자 입장

구분	지상파	콘텐츠 경쟁	케이블	쟁점	위성 /IPTV
클리어퀵 허용	반대	지상파-케이블	찬성	케이블-위성/IPTV	반대
입장	-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 지원은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지상파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에 역행	정부의 지상파무료 다채널과 유료다채널(클리어퀵) 지원 우선 순위	-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이탈 방지 - 저소득층의 디지털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을 강조	유료방송 사업자의 형평성 문제	- 케이블 SO에 채널 편성권을 부여하여 위성파 차등 적용 불만 - 케이블의 아날로그 가입자를 잠정적으로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로 확보하는데 반대 - TV에 클리어퀵이 내장됨에 따라 케이블에 우호적인 사업환경 조성(공정경쟁 기반 훼손)
미래부 계획	- 금년 8월 중 미래부 차원에서의 이해관계자 조정 등 행정업무 지원은 물론이고 셋톱박스 사업자 공개입찰을 주관하고 있는 실정 - 아날로그 케이블 최저가 상품 그대로 디지털 전환하겠다는 생각(채널편성, 요금 동일하게 적용 예정)				

이다. 현재는 구 방통위가 700MHz 주파수 대역의 108MHz 중에서 40MHz를 각각 20MHz로 분할해 통신용을 배정 의결한 상태다.

미래부와 통신업체는 모바일 트래픽 해소와 국제적 조화를 내세워 통신용 할당을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는 700MHz 주파수 대역은 UHDTV 등 차세대 방송과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용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UHDTV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것처럼 일정기간 동시방송 송출이 필수적이므로 신규 주파수 700MHz 주파수 대역 확보 필요), 미래부는 지난 7월 유료방송 중심의 ‘차세대 방송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려 했으나, 지상파 방송사 반발 및 세부내용의 부실을 이유로 추가 논의 후 결정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차세대 방송 기술 발전전략(안)에서는 케이블 2014년부터, 위성 2015년부터 UHDTV를 조기 상용하겠다는 로드맵이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UHD 콘텐츠 제작능력을 갖춘 지상파는 로드맵 자체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UHD 가용 주파수 확보도 담보하고 있지 않아 상용화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상파 4사는 미래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제출하면서 유료방송 중심의 UHD정책은 국민의 보편적 정보 환경에 앞장 서야 할 정부가 도리어 지불 능력이 있는 대상만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빈부격차(Digital Divide)의 심화를 주도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현재 미래부는 방통위와 700MHz 주파수 할당 논의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서 금년 말까지는 정리할 계획이다. 7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지상파와 통신사업자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700MHz 주파수 대역 사용에 대한 지상파, 통신사업자 입장

구분	지상파	쟁점	통신
입장	- 주파수 공공성 강조 - 차세대 방송(UHDTV 등) - 난시청해소	주파수 사용 목적(공익성과 산업논리)	모바일 트래픽 해소와 국제적 조화
미래부 계획	방통위와 전담반을 구성해 협의에 들어가서 금년 말까지는 정리 계획		

지상파와 종편 콘텐츠의 경쟁 : 8VSB

8VSB는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의 전송표준이다. 케이블방송에서는 지상파를 아날로그와 케이블 가입자 모두에게 HD 전송이 가능한 반면, PP(종편 포함)의 HD방송은 디지털 가입자에게만 제공하고, 아날로그 가입자에게는 아날로그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케이블 방송에서 8VSB가 지상파 외의 PP에게도 허용이 된다면, 허용된 PP프로그램은 아날로그 가입자에게도 HD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케이블 방송 총 가입자는 약 1,500만 가구이고, 그 중 디지털 가입자는 약 500만 가구이고, 나머지 약 1,000만 가구가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이다. 디지털 가입자는 지상파와 종편 등을 HD로 시청 가능하다. 케이블 가입자의 67% (약 1,000만 가구)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가입자들은 지상파만 HD로 시청하고, 나머지 채널들은 아날로그로 시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편과 케이블사업자는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8VSB 방식 허용을 미래부에 요청하였다. 종편은 현재 HD로 방송중임에도 시청률이 저조한 것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의 저화질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케이블사업자는 아날로그케이블 가입자가 DTV를 소유하면서 IPTV, 위성방송 등 타 사업자로 이탈을 막아 현재의 플랫폼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별도비용 없이 화질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부는 8VSB 연구반을 가동해 케이블TV의 지상파 이외의 채널에 8VSB 변조방식 허용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9월까지 이해관계자들(지상파, 종편, IPTV등)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사업자는 “케이블 및 종편의 8VSB 허용은 정부의 매체별 균형적인 지원정책에 어긋난 특정 방송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방송시장에 심각한 왜곡 발생, 아날로그케이블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정부정책 역행”이라고 반대 입장이다. IPTV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도 유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은 사업자간 자율경쟁에 의해 사업자 스스로 추진해야할 문제라며 공정경쟁 기반 와해 가능성 지적 등 8VSB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소 PP도 퇴출 우려로 인해 이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반면 디지털 전환 비용이 낮은 SO와 대형 PP는 8VSB를 찬성하고 있다.

미디어 산업간의 균형발전은 지상파 다채널 허용부터

국내 미디어 시장은 현재 과포화 상태라 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에 이어 지난 MB정권하에 출범한 종편의 출현은 국내 TV 수신환경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다. 정부의 친 유료방송 정책 또한 지상파의 앞날을 어둡게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설문조사 기관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지상파에게도 기회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의 이유가 크게 다채널 시청과 지상파방송 난시청 이유를 꼽는다. 지상파의 디지털 방송 이후 전파 수신환경이 좋아져서 난시청지역이 해소되고, 다채널 시청만 가능하면 어느 정도 직접수신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실시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다채널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다. 이유는 정부가 국민의 편익보다 유료방송의 눈치를 더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은 지상파를 적대적인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어, 지상파 다채널이 잠재적으로 자사 고객을 빼앗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한편,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 이후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증가에 따른 지상파 재전송료 비용 지불 상승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이중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와 유료방송의 잘못된 판단이다. 지상파 다채널을 허용한다고 해도 갑작스런 대규모의 가입자 이동은 없을 것이라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정 부분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 수는 미디어 매체 균형 발전 측면이나 유료방송의 재전송료 인상부분 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

지상파 다채널 정책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방송의 공익적, 공영적 측면에서 시청자 편익을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채널 운영권 또한 세계적 기준에 맞게 방송사업자 자율 권한에 맡겨야 한다. 시청자는 지상파 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와 무료 다채널을 볼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4] 케이블 TV 8VSB 허용 여부에 따른 지상파, 케이블, PP, IPTV/위성 입장

구분	지상파	케이블 방송(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IPTV/위성사업자
클리어퀵 허용	반대	디지털 전환 비율 높은 SO	디지털 전환 비율 낮은 SO	종편, CJ E&M 계열채널	군소PP	반대
		반대	찬성	찬성	반대	
입장	- 정부의 매체별 균형적인 지원정책에 어긋난 특정 방송사업자에 대한 특혜 - 아날로그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에 역행하는 정책	- 자본이 풍부한 MSO가 주로 해당 - 케이블 디지털 전환 속도 늦추게 됨 - 디지털 전환이 낮은 SO 합병 기회	- 자본이 열악한 SO가 주로 해당 -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음 - 디지털 전환이 높은 SO에 합병 우려	아날로그 케이블에서도 HD화질로 지상파와의 경쟁력 확보	퇴출우려	-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 목표 역행 - 특정 사업자 특혜 시비 - 자가 유료방송 시장 고착화 - 공정경쟁 기반 와해 가능성
미래부 계획	8VSB 연구반을 가동하였고 오는 10월 경 허용여부를 결정(최종의견 관련 사업자 의견청취가 9월말에서 10월 초 사이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결과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					

종편 재승인, 이대로는 문제 많다

정국을 뒤흔든 국가정보원의 통합진보당 내란예비음모죄 적용으로 종합편성채널은 물을 만났다. 하루종일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정치적인 색채를 쏙 빼고 오로지 종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과연 지금, 종편은 자격이 있는가? 그 자격요건을 종편의 사업 계획 변경 신청과 연관시켜 이야기해보자.

지난 8월 21일 방통위가 승인조건을 어진 종편 4사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TV조선, JTBC, 채널A, MBN 종편 4사의 콘텐츠 투자액 이행률은 계획대비 47.3%에 불과했다. 50%도 넘지 않는 수치를 보인 셈이다. 또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재방 비율 역시 사업계획의 2.5배에 이르렀다. 승인조건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예고하자 종편사가 다시 꼼수를 들고 나왔다. 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니 사업계획을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종편사업자가 예상보다 많이 선정되어 계획을 지킬 수 없다는 변경사유를 들었다. 한 마디로 종편을 4개나 선정한 '방통위 탓'이라는 것이다. 종편이 4개나 되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역으로 사업 경쟁자가 많으니 사정을 봐달라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시정명령을 통보받자마자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곧 시정명령을 지킬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동시에 이들은 더 나아가 종편이 이행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한 셈으로 본다. 실제로 방송법 18조는 이와 같이 방송사가 승인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승인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광고중단, △승인기간의 단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언론연대는 종편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방통위는 즉각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검토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 부분은 가타부타 뭐라고 할 여지가 없다. 당초 정부와 약속한 사업이행 약속을 할 수 없으니 차라리 그 기준을 변경시켜 달라라는 것은 경악할 만한 행동으로 보인다. 언론연대도 이런 부분을 짚어냈다. 이들은 사업계획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방통위는 승인장을 교부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규정은 '방통위가 승인하면 언제든지 사업계획을 변

경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변경은 엄격히 제한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업계획 변경은 승인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이다. 언론연대의 지적은 타당하며, 법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해석이다.

언론연대가 지적한대로 방통위가 만약 종편의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게 되면 매우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 도둑질도 처음은 어렵지만 두 번째는 쉬운 법이다.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말인데, 현재 종편사들은 현재 계획변경의 주요 사유로 '과다한 종편 선정'을 들고 있다. 방통위가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방통위의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방통위 스스로 종편의 승인을 정책적 실패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부산물인 종편도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난백상인 셈이다. 그리고 둘째, 방통위가 실현 불가능한 사업계획에 높은 점수를 매겨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부실심사'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사실 이 부분은 방통위도 할 말이 없다. 종편 개국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 시비가 일어났다는 점을 망각한 것인가? 이 부분은 추후 보도와 진단, 그리고 분석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방통위가 이를 모두 받아들인다면 사업계획 따위를 따

서 남 석 창조미디어연구소 소장

질 게 아니라 종편 도입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이 언론연대의 결론이다. 본고에서도 정확한 지적이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의 파생물을 왜 가만히 두는가. 오히려 잘못된 정책의 파생물을 어쩔수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종편들의 주장대로 '종편이 너무 많아 문제'라면 그들의 뜻대로 '종편 수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수를 줄이면 된다. 그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기준은 강력하고 엄정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법치국가에서 행해져야 하는 절대적인 명제다. 그러나 종편은 이러한 부분을 어기면서도 정부에 오히려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방통위가 이를 냉큼 받아들이려 한다는 부분에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인가.

종편에 대한 추가적이고 확실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장논리에 따라서 종편의 존속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전제가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미디어 환경이 자생할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방송기술, 스마트홈과 연계해야 한다

스마트홈(Smart Home)은 자동화를 지원하는 개인 주택을 말한다. 위키백과를 통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스마트홈은 미국에서는 Domotics라고도 부르며 인텔리전트 빌딩의 각종 자동화 기법(조명이나 온도 제어, 문과 창 제어, 보안 시스템 등)은 가정 자동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안방극장 제어, 자동적이고 효율적인 에어컨, 방범 시스템, 의료 시스템 접속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인텔리전트 하우스 또는 IT 주택이라고 확장되며 유비쿼터시티(u-City)를 향한 게이트 웨이이기도 하다. 주택을 새로 건축할 때부터 가정 자동화를 채용하는 경우, 제어를 위한 배선이 벽에 설비된다. 배선은 콘트롤러에 연결되어 각종 제어를 한다. 최근에는 무선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마트홈 서비스는 어떤 발전 척도를 보여주고 있을까. 삼성전자는 9월 6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3에서 업그레이드 된 스마트가전을 선보이고 편리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스마트홈'을 제안한다. 이들은 이번 IFA 기간에 스마트 TV 및 스마트폰 통합 앱을 통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기능들을 보여 줄 예정이다. 손가락 하나로 집의 모든 가전기기를 통제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대를 더욱 빠르게 당겨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동시에 해당 시장의 선점을 노리겠다는 초강수로 보인다.

특히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스마트 가전 통합 서비스다. 이들의 스마트가전 통합 앱은 하나의 앱으로 집안에 연결되어 있는 가전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 소비자가 통합 앱의 마스터 키(Master Key) 기능을 사용하면 조명을 포함한 모든 기기들이 미리 설정해놓은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어 일일이 제품의 전원을 확인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한 카메라가 장착된 가전 제품들과 통합 앱의 연동을 통해 집안 상황을 스마트폰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홈뷰(Home View)기능까지 갖춰 스마트 가전의 활용성을 한층 높였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홈의 미래를 개략적으로 설명한 무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기술과 스마트홈의 결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다양한 전자기기의 필수적인 생태계 구축 마지노선이 시각적인 자극, 그리고 스마트하게 행해지는 모든 수단의 총합이라는 결론을 내고하면 결론은 간단하다. 이제 모든 전자기기, 그리고 그 내재적 총합의 결론은 스마트홈의 미래에서 파생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은 오로지 방송기술이라는 영역과 꾸준히 결합

여여있을 것이다.

쉬운 예로 스마트카가 있다. 물론 다분히 가상만화적인 상상력에서 출발한 이 스마트카의 개념은 방송기술 영역의 결정체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러나 국내의 스마트 시장은 통신기술과의 결합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산업효과를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방송기술의 거대한 영역 안에서 행해지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편중된 시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통신의 발전이 방송의 발전과 일정 정도 역학관계를 가진다는 절대적인 명제를 상기해보면 이는 더욱 간단해진다. 바로 이 부분이다. 스마트홈 시대의 스마트카로 알 수 있듯이, 이제 모든 방송기술은 다양한 스마트홈 시대의 부산물이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방송기술은 스마트라는 단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첨단의 전선을 걷는 다양한 방송기술과 IT의 융합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한 시각적 효과에만 집중한 방송기술의 스마트화는 이제 미래가 없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생명력을 보장받으려면 스마트한 미래의 방송기술 자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물'을 찾아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해 하나의 단정으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라는 뜻이다. 방송기술은 통신기술과 결합해 스마트의

주 미 소 미디어융합연구소 3팀장

미래를 더욱 구체적으로 결집시키고, 이러한 부분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삼아 새로운 산업으로 파생시켜야 하는 정당성을 가진다.

IT의 궁극적인 미래는 편안한 삶에 있다. 그리고 이 편안한 삶에 녹아든 방송기술은 통신과 IT의 결합으로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보유했 것이다. 그 부분의 시너지 효과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다양성의 충돌이며, 어렵게 말하면 더 나은 제 3의 영역 개발이다. 쉽게 가도록 하자. 다양성의 충돌은 그 너머의 영역을 발전시킬 촉매제가 된다. 스마트홈 시대의 방송기술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사실 방송기술의 영역이야말로 스마트홈과 연계된 사회 문화적 기술 플랫폼과 커다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미 스마트 시대로 접어들어 현재에 이르러 이러한 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당장 뉴미디어 플랫폼만 하더라도 가전제품과의 연계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러한 부분은 가전사의 책임론을 더욱 부각시키겠지만, 스마트홈의 미래도 사실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방송기술은 고민해야 한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스마트홈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지 말이다. 그것이 바로 핵심으로 가는 포인트다.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발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 터 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 독 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KOBASHOW 2014



24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2014.05.20-23
COEX, SEOULwww.kobashow.com

주 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이앤엑스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영상산업협회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